

중국 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선언문

2000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홍콩, 대만, 조선, 한국, 필리핀, 미국, 일본의 학자, 변호사, 기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75명이 중국 상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를 개최했다.

일본정부와 군대가 전쟁권과 전쟁당시에,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시행한 군위안부제도는, 군대성노예제이기도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의 반인도적 범죄이며,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또한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조직적, 계획적인 성폭력이라는데 회의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최근 삼수년간 여러나라의 피해자 관련단체, 학자 및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자료들과 중요성도 어느정도 회복되었다. 본회의는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각국의 정부, 단체와 개인이 회의를 통해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채록을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작업을 발전시키고, 정보교환과 연대활동을 위하여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 회의 참가자 전원은 또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난지 55년이 지났지만, 일본정부는 공식하고 합법적으로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나라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직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처리에 관여없이, 피해자 개개인은 모두 국제법상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회의는 확인했다. 일본정부는, 각국의 위안부 제도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배상요구를 무시해야 한다. 어떠한 국가는든 자연, 왜곡, 부인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행위이다. 소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란 방식을 통하여 무언하든 행위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군위안부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각국의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며, 기념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본우익세력의 활동이 날로 팽창하고 있는 지금, 일본정부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쟁범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본회의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관행국제비판'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국의 단체와 학자들이 힘을 모으길, 새천년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호소한다.

2000년 4월 1일

중국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 참가자.